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몽골

### Mongolia

2023년 4월 24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564천 km <sup>2</sup> 	<b>인구</b> 346만 명 (2022e) 	<b>정치체제</b> 이원집정부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68.3억 달러 (2022e) 	<b>1인당GDP</b> 4,863달러 (2022e) 	<b>통화단위</b> Tugrik 	<b>환율(U\$기준)</b> 3,143.80 (2022)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3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GDP의 20% 이상 및 총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음.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 정책' 하에 일본, 인도, 한국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 및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시행, 몽골 최대의 오유 톨고이 광산의 생산 확대, 러시아-중국과의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 경제과학기술협정(1991), 문화협력협정(1991), 투자증진보호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약(1993), 세관협력협정(19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6),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 범죄인인도조약(2000), 형사사법공조조약(2000), 관광협정(2004), 사회보장협정(2007), 수형자이송조약(2008),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20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271,157	384,715	426,344	자동차, 기호식품, 건설광산기계
수입	20,535	24,949	38,240	의류, 기타금속광물, 동광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707건, 526,261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7.7	5.6	-4.6	1.6	4.8
소비자물가상승률	6.8	7.3	3.7	7.4	15.2
재정수지/GDP	2.9	1.0	-9.2	-3.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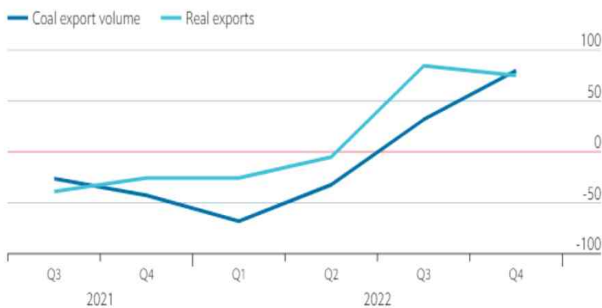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코로나19 팬데믹,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기대

- 몽골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 감소,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2020년 -4.6%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FDI 유입 증가, 교통 인프라 확충,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 등에 힘입어 2021년 1.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데 이어 2022년 4.8%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도 4%대 중반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
- UNCTAD에 따르면 몽골의 FDI 유입은 2017년(14.9억 달러)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약 29% 감소한 1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24.5% 증가한 21.4억 달러를 회복하며 FDI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몽골 경제는 대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은 몽골의 광물 수출입 물류 운송에 큰 타격을 입혔음. 그러나 대 중국 석탄 수출 증대,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철도 인프라의 개통을 통한 상품수출 수익 증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몽골 최대의 오유 틀고이 구리 광산에서의 구리 생산·수출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는 몽골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2022년 몽골의 전체 수출 및 석탄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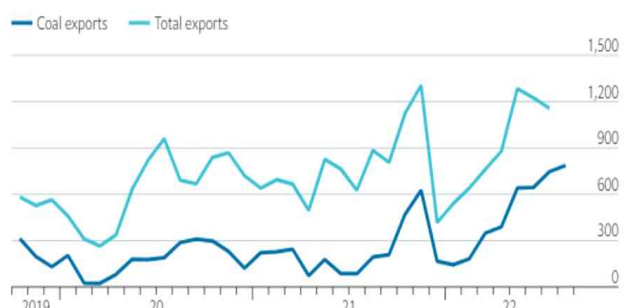
Soaring coal exports drove Mongolia's economic expansion in 2022  
(% growth, year on year)



출처: Haver, EIU

[그림 2] 몽골의 석탄 수출과 총수출 추이

Coal has been the mainstay of Mongolian exports  
(US\$ m; non-seasonally adjusted)



출처: 몽골 통계청, EIU

## 국내경제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23년 연속 두 자릿수 전망

- 2022년 15.2%로 전년(7.4%)보다 2배 이상 급등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에도 11%대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8%)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IMF).
- 소비자물가 급등은 국내 육류 생산량 감소와 같은 내부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품 국제가격 상승,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경 통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그로 인한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달러 강세로 인한 투그릭화 평가절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높은 물가에 반발하는 대중 시위가 촉발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11%에서 6%까지 인하했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한 해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6.5%에서 13%까지 인상,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 몽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 11%(2018.12월) → 10%(2020.3월) → 9%(2020.4월) → 8%(2020.9월) → 6%(2020.11월) → 6.5%(2022.2월) → 9%(2022.3월) → 10%(2022.6월) → 12%(2022.9월) → 13%(2022.12월)
- IMF는 국내 육류 생산량 증가, 식량 및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러시아산 석유의 할인 구매 합의 등으로 몽골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대규모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EIU는 몽골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예상 시점(2023년 5월)을 넘어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몽골 정부는 중앙은행의 대출자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이 국민에게 최대 30년 간 8%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발생 시 공공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의 축소로 재정수지는 2022년 흑자 전환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9.2%, 2021년 GDP 대비 -3.1%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2년 4월 제정된 긴축 법안에 따른 지출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긴급 지원정책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8%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 코로나19 관련 방역 정책, 경기부양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정부에게 요구되었고 또 실제로 가계·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지출이었으나, 몽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됨. 2020~21년 몽골 정부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3% 규모의 재원을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지원에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함.
- 몽골 재무장관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도입 등을 통한 긴축 재정정책으로 2023년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1조 투그릭 감축하는 등 긴축법을 통해 정부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음. IMF는 몽골이 2023년에도 미미하나마 재정수지 흑자(GDP의 약 0.3%)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부채 규모를 GDP의 70%대 중반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1,903	-2,162	-675	-2,108	-2,876
경상수지/GDP	-14.4	-15.2	-5.1	-13.8	-17.1
상 품 수 지	685	1,158	1,756	1,370	1,106
상 품 수 출	6,557	7,183	6,991	8,136	10,223
상 품 수 입	5,871	6,025	5,235	6,766	9,117
외 환 보 유 액	2,717	3,182	3,995	3,671	2,864
총 외 채	29,684	31,650	33,236	34,058	35,584
총외채잔액/GDP	224.8	222.8	249.7	222.8	211.4
D.S.R.	49.2	42.0	65.6	35.0	29.0

자료: IMF, EIU

### 중국의 리오프닝 및 교통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 중국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기대

- 상품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몽골을 찾는 관광객의 약 50%를 차지해온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국경이 폐쇄되며 관광 부문(2019년 GDP의 약 7%)이 큰 타격을 입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2021~22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어 2022년 경상수지는 GDP의 17.1%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약 64만 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만 7천 명, 2021년 3만 9천 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였음.
  - \* 서비스수지 적자/경상수지 적자(%): 76.2('18) → 92.1('19) → 215.0('20) → 79.5('21) → 81.3('22<sup>e</sup>)
- 2023년에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에 따른 리오프닝으로 몽골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이 증가하여 몽골의 대 중국 상품수출 증가 및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2022년 9월 몽골의 타왕톨고이(Tavantolgoi) 탄광과 중국 국경 지대의 가송소하이트(Gashuun Sukhait)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4km의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대 중국 석탄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몽골은 동 철도를 통해 연간 3천만 톤에서 5천만 톤에 이르는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 과거 트럭을 통한 운송방식에 비해 운송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수출액 증가는 2022년 수입물가 급등으로 급격히 감소한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대외거래

- 한편, 몽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강 상태였던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24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음. 환경관광부 장관은 2024년까지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항공교통 확대,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코로나19가 완화되자 몽골 정부는 입국 제한을 해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2021년 3만 9천 명에서 2022년 3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관광업의 회복이 시작됨. 몽골 정부는 광업 부문에 치우친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관광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인접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대외거래 의존도 증가

- 몽골은 대 중국 석탄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석유제품 수요의 약 9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대외무역 거래를 러시아계 은행들에 의존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외거래 의존도 역시 매우 높음. 이처럼 중국·러시아와의 대외거래가 많은 몽골은 EU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의 새로운 경로가 될 예정이며, 현재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임.
- 몽골 내륙 960km를 거쳐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PoS2)은 2024년에 착공될 예정으로, 기존의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연간 공급해온 380억 m<sup>3</sup>보다 많은 연간 500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이로써 몽골은 그동안 광물 수출과 광업 부문의 로열티에 의존해왔던 수익에 더해 천연가스 운송료뿐 아니라 만성적인 대기오염의 개선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더욱 저렴하게 공급받아 공공 부문 수익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과 연결하는 노드스트림2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으나, 가스관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장비 도입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어 몽골과 러시아 모두 중국에 대한 대외거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시베리아의 힘 2”(몽골을 통과) 가스관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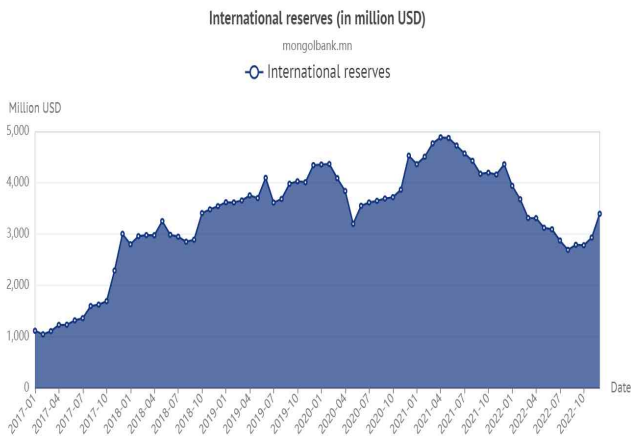
출처: Russia Briefing

## 외채상환능력

### 광물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 기대

-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투그릭화 지속적 평가절하를 저지하려는 중앙은행의 개입,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대 중국 수출의 팬데믹으로 인한 감소 등으로 인해 2020년 말 40억 달러에서 2022년 말 28.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고 철도 인프라 개선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로 인한 석탄 및 구리 수출의 급증 전망, 오유 톨고이 광산의 생산 재개와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등 경기회복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기대됨.
- 몽골 중앙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4월 4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8월 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 1월 35.6억 달러에 이르러 점차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4] 2017~22년 몽골 외환보유액 추이



출처: 몽골 중앙은행

[표 1] 몽골 외환보유액 변동(2020.11월~2023.1월)

년월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증감율(%)	
		전월대비	전년대비
2023-02	3,394.73	-4.63	-7.87
2022-11	2,935.20	5.35	-29.53
2022-05	3,126.30	-5.69	-35.92
2021-11	4,165.20	-0.86	7.63
2021-05	4,879.10	-0.26	52.33
2020-11	3,869.90	3.95	-3.62

### 만기채권 상환을 위한 새로운 국채 발행으로 외채규모 증가

- 몽골 정부는 2020~21년 동안 낮은 글로벌 금리로 국채를 새로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를 일부 상환하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주요 외채 원금 상환을 2027년 이후로 연기할 수 있었음. EIU는 몽골이 새로운 국채 발행과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2023~24년 대외채무 상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는 불가피함.
- 몽골 정부는 총 4.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음. 이를 통해 2023~24년 만기 채권은 현금과 2028년 만기 채권 액면가로 대체되면서 정부 발행 유로본드 만기 도래분이 2023년 8,200만 달러, 2024년 3억 9,070만 달러로 축소되어 유동성 압박이 완화되었음. 다만, 2023년 10월 5억 달러의 국채 및 12월 몽골개발은행(DBM)의 300억 엔 사무라이 본드 만기가 도래할 예정임.
- 몽골 중앙은행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Chinggis-18", "Mazaalai", "Nomad" 등 총 9가지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2023년 1월까지 "Mazaalai" 포함 4개 채권 상환을 완료하였음. "Century-2" 채권 발행을 통해 2023년 상환 예정인 "Gerege" 채권과 2024년 상환 예정인 "Khuraldai" 리파이낸싱을 완료하며 외채규모가 증가함.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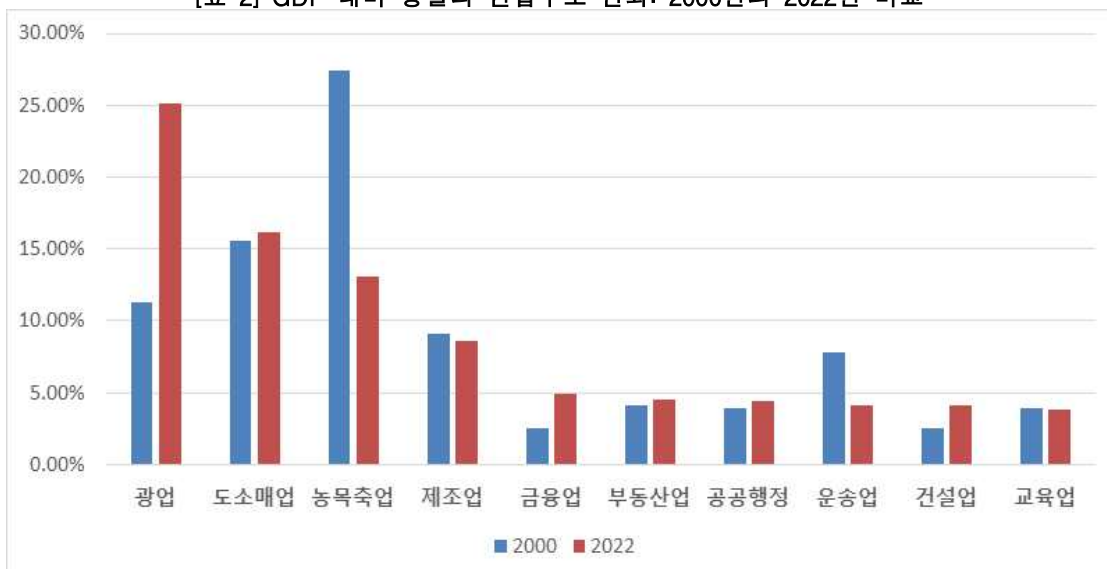
###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몽골은 내륙국의 특성상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 UNCTAD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 몽골 상품수출의 82.2% 및 상품수입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 투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1년) 중국의 48.3억 달러로 전체의 14.8%를 기록하였음(몽골 통계청).
- 동 기간 중 몽골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중국보다 많은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며(157.4억 달러로 전체의 48.7%를 점유), 광산업에 투자가 집중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투자자본은 광산업, 무역업, 요 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중국의 투자 감소 시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몽골 경제를 중국의 경제·정치 환경 변화에 취약하게 만들.
- 또한 몽골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한편, 대외무역 관련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계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음. 2024년에 진행 예정인 몽골 경유 러시아-중국 파이프라 인 프로젝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경제적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 광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의 다각화 필요

- 몽골은 2000년만 해도 농·목축업이 전체 GDP의 27.4%를 차지한 전통적인 유목국가였으나, 이후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전체 GDP의 25.1%를 광산업이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였음. 아울러 광산업은 2022년 기준 상품수출의 84.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주요 수입국의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새로운 산업 발굴을 통한 경제 다각화가 필요함.

[표 2] GDP 대비 몽골의 산업구조 변화: 2000년과 2022년 비교



출처: 몽골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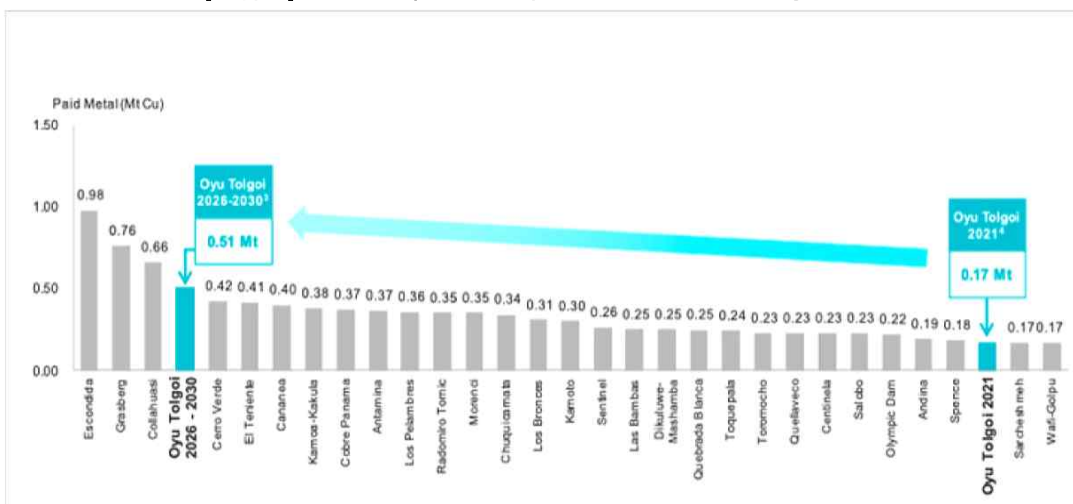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 세계 10위권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각각 세계 2위와 4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석탄 외에도 약 80가지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희토류 역시 전 세계 매장량 중 약 16%가 몽골에 매장되어 있음.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몽골 총 수출액의 84%가 광물자원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하자원 수출 및 개발 관련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통한 성장이 기대됨.
-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따른 수익 창출, 2023년 상반기 몽골 최대 구리 광산인 오유 톨고이 지하광산의 가동 등이 몽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몽골은 자국 영토를 경유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를 통해 통과로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천연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됨.
- 오유 톨고이 구리 광산은 지하광산 본격 채굴을 위한 광맥 폭파를 예정일보다 4개월 앞당긴 2022년 6월 단행하였으며, 2028년부터 최대 규모 생산에 착수하면 연간 약 57만 톤의 구리 정광을 생산하여 연간 매출액이 현재 몽골 경제의 약 40%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21년 기준 오유 톨고이 광산의 구리 생산량은 세계 27위 수준이나, 2028년부터는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5] 2028년 기준 세계 주요 구리 광산의 생산량 순위












출처: KOTRA, Wood Mackenzie

## 성장잠재력

###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 수립 및 추진으로 다방면에 걸친 국가 발전 도모

- 2020년 몽골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한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을 발표하였음. Vision 2050은 과거 실행되었던 개발계획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4년 단위로 단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3단계의 국가 장기 개발 프로젝트임.
- 1992년부터 추진한 51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된 Vision 2050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존의 개발계획 'Vision 2023'과 달리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IT 산업 발전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산업 발전 및 국민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Vision 2050의 주요 내용은 몽골 GDP 중 단순 채광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광물 및 농축산물의 제조·가공업 비중 확대를 통해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전자개발통신부 신설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절차의 투명화, 부패 척결 및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임.
- Vision 2050 수립에 참여한 몽골 경제학자 도르지(Dorj)에 따르면, 과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이 장기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중간점검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전 2050' 역시 그와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6] 비전 2050 장기 개발정책의 9개 주요 목표

No.	목표	세부 내용	No.	목표	세부 내용
1	문화강국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강한 민족이 될 것 (세부 목표 47개)	6	녹색 개발 	녹색 개발을 통해 존중해(중요시해) 자연환경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세부 목표 28개)
2	인간 개발 	몽골 인간개발지수를 0.9에 도달하고 행복지수로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 (세부 목표 57개)	7	안전한 사회 	몽골 민족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내외 환경을 구축 (세부 목표 9개)
3	삶의 질 및 중산층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구성된 중산층의 비율을 2050년에는 전체 국민의 80%에 도달시킬 것(세부 목표 17개)	8	지역중심개발 	안정적인 인구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몽골내 지역 개발 (세부 목표 9개)
4	경제발전 	GDP 6.1배 증가, 1인당 GDP 1만 5000미국 달러 도달, 세계 선진국 기준 도달할 것 (세부 목표 11개)	9	울란바토르 및 위성 도시 	살기 좋고 친환경적이며 국민 중심의 도시 개발 (세부 목표 2개)
5	바른 정부 	안전한 정부, 인권 보호 및 공평한 체계 가동, 뇌물 없는 국가 (세부 목표 6개)			

출처: KOTRA, 몽골정보통신기술국

## 정책성과

### 新부흥정책 승인을 통한 정책 연속성 확보

- 2021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몽골 정부의 新부흥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대응하여 경제 개발 가속화, 국가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 탈피 및 Vision 2050의 세부계획 실행을 위해 ①국경 통관소 부흥, ②에너지 부흥, ③산업 부흥, ④도시와 지자체 부흥, ⑤녹색개발 부흥, ⑥행정 생산성 부흥의 6가지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정책의 추진에는 총 100~120조 투그릭화(약 4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지난 30년 간 몽골 내각회의에서 500개 가량의 국가발전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내각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연속성 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실을 교훈 삼아 新부흥정책 시행에 대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향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단절을 방지함.

[표 3] 몽골 新부흥정책 내용

분 야	내 용
국경 통관소 부흥	• 내륙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연결된 국경 통관소들을 도로, 철도, 고속도로 등으로 연결하고 항공로 개선
에너지 부흥	• 전력·에너지 부문의 노후화, 공급 부족, 가격 안정화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성 상실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실정 • 신규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친환경적인 신규 프로젝트 추진
산업 부흥	• 지하자원, 축산자원 등 잠재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실정 • 정유공장 및 화학단지, 석탄 세척공장, 구리 제련공장, 산업단지 조성(제철소 등), 농축산업개발, 남고비 지역 수로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도시와 지자체 부흥	•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인구 50% 이상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울란바토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위성도시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국경 통관소 및 지방도시에 정착지 조성 등을 통한 인구 집중화 해소, 외부순환도로 신설,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프로젝트 추진
녹색개발 부흥	• 지구온난화 가속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국가 지향 차원에서 국가 단위 프로젝트(나무 10억 그루 심기 등) 추진, 저수지 및 수로 건설 등을 통해 고비 사막 지역에서의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
행정 생산성 부흥	• 정부 등 행정기관의 비효율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여 국민, 기업, 투자자에 우호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자화 사업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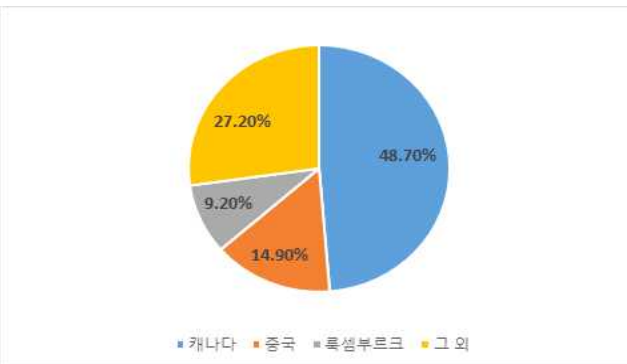
출처: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진행 중

-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013년 제정된 신투자법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외국인의 몽골 시장 진출에 대한 면허 폐지, 빠른 등록 절차,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안정화 및 투자자에 대한 우호적 조건의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광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입액 규모는 2019년 24.4억 달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17.2억 달러로 감소한 뒤 2021년 21.4억 달러로 회복되었음.
- 몽골 경제개발부는 몽골 투자가이드를 발간하고 ①정부기관과의 시너지를 통한 이익 관리, ②사업 및 지리적 다각화, ③인센티브 등 더 나은 투자환경, ④원스톱 서비스, 고충처리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정책, ⑤승인 불필요 및 무차별 등 시장 개방성, ⑥지적재산권 보호 등 투자자 권리 보장의 총 6가지 분야에서 대 몽골 투자의 매력을 설명하며 외국인투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존 양허법을 '민간협력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투자법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음.

[그림 7] 2011~21년 몽골의 FDI 산업별/국가별 비중



출처: 몽골 통계청

[표 4] 양허법, 투자법 주요 개정사항

법명	주요 개정사항
양허법	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기업과 정부가 균형적 위험 분담, 정부의 지원사항 구체화
	양허사업과 부지, 담보, 사업비 등 문제 조정 구체화
	양허사업의 산업 분야, 사업 종류, 요구사항 등 확정
	민간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국책사업에 활용
	분쟁 해결 및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BT 형태 양허사업 전면 폐지
	양허사업 유형에 적합한 계약조건 제시
양허사업 개발연구소 설립	
투자법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구체화
	정책적 우선순위 산업 분야 확정 및 지원 사항 구체화
	투자자의 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안정화 증명서를 산업 분야와 산업지역과 연계 발급
	투자정책 및 법규,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출처: KOTRA

## 정치안정

### 지난 총선 및 대선에서 압승한 집권 몽골인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차 증가

- 2020년 6월의 총선에서 집권 몽골인민당(MPP)이 전체 76석 중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2021년 9월의 대선에서도 MPP 대선 후보인 우흐나 후렐수르 전 총리가 67.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MPP의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높은 득표율에 비해 전체 투표율이 높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이른바 '석탄 마피아 스캔들' 등으로 MPP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EIU는 MPP가 2024년 6월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의석 수는 현재보다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야당인 민주당(DP)이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2017년 55.2%에 달하던 득표율은 6.4%까지 떨어졌으며, 대선 총투표율은 59.3%에 불과한 점 등은 대선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비해 MPP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와 그에 따른 가게 및 기업이 직면한 재정적 고통으로 인해 MPP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거세졌으며, 국영 광산회사의 석탄 횡령 사건인 '석탄 마피아 스캔들'로 MPP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였음. 이 스캔들에 대한 수사에서 MPP 내의 부정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시위가 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총리의 해임 또는 사임을 포함하여 향후 내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몽골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지만 결함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

- 몽골은 EIU가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점 6.42점으로 167개국 중 62위를 차지함. 이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수준으로,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우수한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됨.
- 몽골 민주주의의 장점은 선거문화 및 제도가 투명하다는 것으로, 2020년 6월 총선과 2021년 9월 대선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의혹 제기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부가 부패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함.

## 사회안정

### ‘석탄 마피아 스캔들’ 및 높은 물가로 인한 대규모 시위 발생

- 2022년 12월 국영 광산회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국 수출용 석탄 650만 톤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2022년 12월 15.2%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함께 계기가 되어 인플레이션 해결과 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벌어졌음.
- 2022년 11월 말 몽골 반부패청이 국영 석탄기업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대표를 포함한 몽골 관료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횡령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석탄 마피아’라 부르며 수도인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앞에서 석탄 횡령 스캔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조직되었음.
-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시위대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높은 물가 및 지난 4월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 부족으로 인한 시위에 대한 정부의 미응답 등에 항의하여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시작하였음. 시위대는 고위직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책임 있는 고위급 공무원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며 정부청사를 훼손하고 경호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점차 과격해지며 폭력 시위로 번지게 되었음.
- 이에 몽골 의회는 국가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선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수사와 관련자 체포 및 석탄 판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시행을 통해 집회를 일단락시켰으나 집권 여당 MPP가 당파적 수사로 인해 당내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2023~24년에도 다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몽골이 높은 기후·환경 및 사회적 위협에 노출된 점, 사회적 혼란이 있는 점,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및 높은 외채부담 압박으로 인해 환경·사회 위협 대응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몽골은 폐기물 발생,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석탄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삼림 파괴와 국토의 사막화가 진행되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소득 불평등이 청년층 인구 증가와 정부의 사회안전망 마련 등으로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Vision 2050’ 등 전반적 사회개혁을 추진 중이나, 정책 집행 전담 기관의 부재와 부정부패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에 의해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여 몽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 유지

-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의 관계는 2022년 11월 양국 무역액을 2021년도의 2배인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약정의 체결로 더욱 견고해졌으며, 중국은 몽골과의 운송 연결 확대와 대 몽골 투자를 가속하는 등 몽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과의 국경까지 이어지는 몽골의 석탄 및 구리 광산 철도가 새로 개통되었으며, 2022년 9월 5년 간 연장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몽골의 기존 철도 노선들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통해 칭기즈칸을 비롯한 몽골의 역사마저도 자국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어 몽골 대중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몽골 정부는 자국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FDI 및 관광객 유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고려하여 외교 등의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음.
- 몽골은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관련 결제를 대부분 러시아계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와도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쿠렐수크 대통령은 첫 해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몽골 내 희토류 금속자원 탐사에 보다 강력한 양국 협력을 요청한 바 있음.
- 몽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러시아와 EU 국가들 간의 불화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연결하는 중계국으로서 양국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공급하는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프로젝트가 2024년 착공될 예정임.

###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한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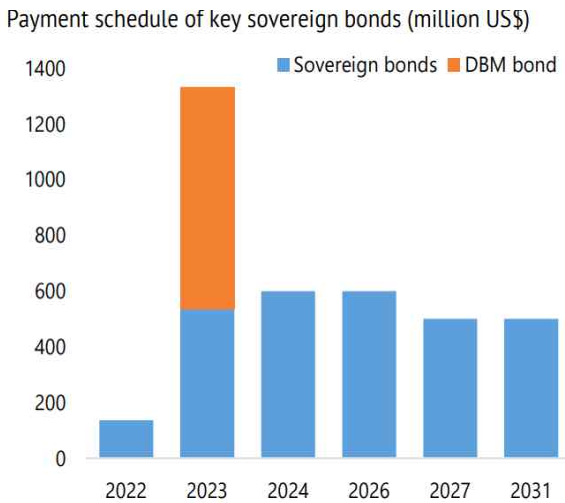
- 다른 한편으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UN에서의 교류와 활동을 늘리는 등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몽골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운송되어야 한다는 점은 서방 국가들의 몽골로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제3의 이웃'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몽골은 미국과 2014년 '미국-몽골 안보 관계 공동성명'을 체결하여 군사·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2015년 일본과 최초로 EPA(경제협력협정)를 체결하고, 2020년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 중임.
- 몽골 정부는 일본, 인도, 미국 등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arategic Partnership)로 지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다른 외교상대국들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 확장된 동반자 관계(Extended Partnership) 및 확대된 동반자 관계(Expanded Partnership)로 구분하여 다양한 외교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외채상환 압박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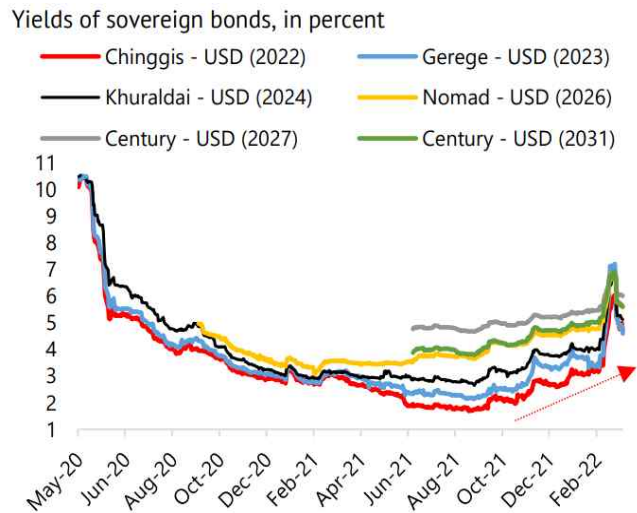
- 2022년 9월 말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 잔액은 1,530.1백만 달러(단기 48백만 달러, 중장기 1,482.1백만 달러)이며, 이 중 6.8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 비율은 0.4%로 낮은 편임.
- 한편,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며,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의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부족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고 있음. 몽골 정부는 저금리 채권 발행을 통해 기존 외채를 일부 상환하는 등 중장기 외채 부담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채상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함.

[그림 8] 2022~31년 몽골의 외채 상환금액



출처: 몽골 재정부, 중앙은행, 세계은행

[그림 9] 몽골 국고채 금리 (2020.5월~2022.2월)



출처: 블룸버그, 세계은행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2.06.)	7등급 (2021.06.)
Moody's	B3 (2023.02.)	B3 (2021.05.)
Fitch	B (2022.05.)	B (2021.05.)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는 몽골의 신용도등급 유지

- OECD는 몽골이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외채부담이 과중하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OECD는 2020년 6월 이러한 불안정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만연한 부정부패·소득불평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몽골의 국별위험도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 중임.
- 반면,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Fitch는 IMF의 지원을 통한 재정 및 외부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이유로 2018년 등급\*을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 : Caa1 → B3 / Fitch : B- → B

- 몽골은 2016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뒤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며 2019년까지 5~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외환보유액을 2016년 대비 2배 가량 확충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지며 몽골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 1.6% 및 2022년 4.8%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3년에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석탄 수출 증대, 광산의 철도 연결 및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에 따른 생산량 증가, 관광업의 회복 등으로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2020년 총선에서 몽골인민당(MPP)이 재집권하고 2021년 대선에서 MPP 후보인 후렐수흐 전 총리가 승리를 거두며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함. 이를 통해 'Vision 2050'과 같은 장기 국가개발 계획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석탄 마피아 스캔들'과 같은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